

정부, 하반기 창업지원규모 대폭 늘린다

청년·중장년 융합 40팀 추가모집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자 양성
친환경차 등 지역 신산업 육성

■하반기 창업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 | |
|---------------|-------|------------------------------|
|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25일부터 | K-스타트업 홈페이지(k-startup.go.kr) |
| - 청년창업사관학교 | 19일까지 | |
| - 지역기업 혁신역량강화 | 9일까지 | |

이번에 모집하는 창업팀은 18일에 신규 선정되는 주관기관별로 창업기업 선정과정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받는다.

신청대상은 청년 1인 이상과 중·장년 1인 이상이 팀 구성을 완료한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기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창업팀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 등의 사업비와 창업공간을 받는다. 또 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의 초기창업 전 단계에서 도움받으며, 우수 창업팀에는 후속투자과 글로벌 진출지원 등 최대 3000만원의 후속 창업자금이 주어진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전국 550명 모집=정부의 대표적 창업지원 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서울 등 전국에 12곳을 더 늘리고 오는 19일까지 예비 청년창업자 550명에 대한 모집에 나선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창업 교육부터 시제품 제작, 해외 진출, 투자 등 사업화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해 혁신적인 청년 최고경영자(CEO)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관학교는 기존 경기 안산, 광주, 충남 천안, 경북 경산, 경남 창원 등 5곳 외에 이번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울산,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2곳에서 문을 열었다. 12곳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 운영기관이 창업자 양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업교육, 제품개발 사업화 코칭 등을 전담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업공간 확보와 정책 지원을 해준다.

만 39세 이하(기술경력자는 만 4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하 기업 대표 주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1년간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사무공간 등 창업 인프라, 전문가 코칭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 창업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정책자금 융자, 마케팅·판로, 기술개발자금, 해외 진출 지원, 투자유치 등 후속연계 지원과 사업화 자금 최대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도 추가모집=지역별 신산업분야의 유망 창업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지역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도 창업기업 추가모집에 들어간다.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화와 권리와, 시장검증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주는 친환경 자동차, 전남은 바이오 활성소재가 해당 전략사업이다.

정부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선발에 있어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 7년 이내 기업도 2점의 가점을 준다.

접수마감은 오는 9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광주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062-974-9326), 전남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061-661-1942)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계현 소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창업 후 5단계 매출전략

최저임금의 인상과 머지않아 소상공인들에게도 적용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형 화두는 기존 자영업자나 창업을 앞둔 예비창업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요소에 의한 부담은 자영업자들에게 비용절감이나 매출강화라는 둘 중 하나의 목표를 선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물론 둘 다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미 정해진 고객층과 일정 구간 내의 매출의 등락 그리고 자리가 잡힌 운영시스템과 고정비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개의 자영업자들은 비용절감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정작 외면하게 되는 매출강화 전략에 대해 단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단계적 매출전략의 순서는 크게 다음과 같다. 1단계 고객 유입전략, 2단계 재방문을 확대전략, 3단계 객단가 상승전략, 4단계 파생상품(추가 수익모델) 강화 전략, 5단계 고객충성도 강화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식업을 기준으로 각각의 단계별 전략들을 알아보고 하자. 먼저 첫 번째 단계인 고객 유입전략은 창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준비사항 중 하나가 고객유입전략이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많이 오게 할까에 대한 고민은 모두의 필수 사전준비 사항에 해당된다. 매력적이고 안정된 메뉴와 운영전략 그리고 고객서비스를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홍보마케팅과 이벤트를 통한 고객유입 전략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실행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인 재방문을 확대전략은 기존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방문횟수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메뉴의 분석을 통한 보완형 메뉴의 출시나 고객대상 이벤트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하게 된다. 가령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재방문을 높이기 위해서 커피를 추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른 메뉴도 마찬가지다. 풍나물 해장국집이라면 다른 해장국도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서 고객의 재방문을 끌어 올려야 한다. 여기에 계절이나 사회적, 시가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이벤트를 가미하면 재방문율은 증가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인 객단가 상승전략은 정채된 고객의 객단가와 테이블 단가를 끌어올려서 매출과 수익을 강화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메뉴의 출시나 세트메뉴의 출시 등을 통해 조금 더 높은 가격대의 메뉴들이 추가로 제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메뉴와 메뉴를 묶는 세트 메뉴도 좋지만 술을 찾는 고객도 많은 업종이라면 메뉴와 메뉴 그리고 술을 묶는 세트메뉴의 구성이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증가한 세트 메뉴의 구성방식이다. 또한 포장 가능한 메뉴의 출시도 강화하여 고객이 매장 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귀가하면서도 올려주는 구조도 좋은 선택이다.

네 번째는 파생상품 강화전략은 기존 메뉴나 반찬, 식자재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상품을 고객들에게 구입하게 하는 방식이다. 가령 고기와 김치가 맛있는 고깃집이 있다면 매장 내에서 고기만 팔 것이 아니라 김치와 고기를 포장하여 냉장진열대에 놓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하나만 더 들자면 황칠백숙이나 황칠삼겹살집이 있다면 황칠을 활용한 황칠전어, 황칠차 등의 황칠 관련 파생제품 등을 전열대에 놓고 판매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 모든 단계별 전략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하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변화를 수시로 줘야 하며 홍보마케팅을 멈추면 안 된다. 당장 장사가 잘 된다고 변화를 주지 않고 홍보마케팅을 멈추면 결국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사회적경제 기업 청년 채용하면 1명당 연 2400만원 지원

창업지원기간 2년으로 확대

혁신적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청년 한 명을 채용하면 연간 최대 24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경제로 인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2년 동안 청년 1인당 인건비로 연 최대 24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자금, 사업 공간,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청년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신(新) 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

동부 산하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전 캠퍼스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은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대를 말한다.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이 정신을 겸비한 사회적경제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과정도 손질한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을 지정해 사회적경제 연구개발과 학부 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은 내년에 3곳을 지정하고 2022년까지 50곳으로 늘려 사회적경제 학부 전공자 500여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사회적경제를 반영해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식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교재를 만들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경제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예정이다.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초·중·고등학교의 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 필수과목 내용에 사회적경제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경제 교육 콘

텐츠 개발을 위해 사회적기업지원에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수시설을 갖춘 인재개발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교육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조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의 87.5%가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본 적이 있어도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사회적경제 학부를 운영 중인 대학도 2곳에 불과하고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18.6%만 교육에 참가하는 등 인재양성 기반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사회적경제의 고용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1.4%로, 유럽연합(EU) 28개국 평균(6.3%)에 크게 못 미쳤다. EU의 경우 경제·고용위기에서 사회적경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민·관·학·민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이번 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청년창업 세무·기술보호

연 100만원 바우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해 청년창업기업에 부가세 신고 수수료 등 세무·회계분야와 기술인력수수료 등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15년 7월7일 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 7월7일 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분야'는 '기술자료임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